포럼 22-07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2. 8. 11.(목) 14:00~18:00

더케이호텔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목 차

주제발표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 1
  (**김윤영**,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
- 다문화청소년 교육의 방향과 과제: 평생교육 관점의 정책 접근 ····· 11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지방자치단체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사례와 함의 ····· 25
  (**이혜숙**, 안산시청 청년정책과 과장)

종합토론

- 『후기 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 ····· 37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 41
  (**민숙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다문화청소년 교육의 방향과 과제: 평생교육 관점의 정책 접근』 토론문 ····· 45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다문화청소년 교육의 방향과 과제: 평생교육 관점의 정책 접근』 토론문 ····· 49
  (**이로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 청소년 정책 수립 현황은? ····· 55
  (**허승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부센터장)
-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근본적 정책개선이 우선이다. ····· 61
  (**김수영**, 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 대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김윤영**,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 김 윤 영

후기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 개념

[청소년기본법] 제 3조에 근거,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초기청소년(9~14세), 중기 청소년(15~18세), 후기 청소년(19~24세)로 정의 (김지경, 2015).

- 현황

- 나문화가족사녀 18-24세 (19' 3월): 13,020명 (여성가족부, 전국나문화가족실태조사)
- 외국인 주민 (21'11월)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연령별 유형별 현황(행정안전부, 2020)

구 분	합 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
계	1,695,643	455,287	173,756	142,569	345,110	578,921
0~9세	62,843	*	*	*	936	61,907
	3.7%				0.3%	10.7%
10~19세	42,927	449	646	13,845	1,934	26,053
	2.5%	0.1%	0.4%	9.7%	0.6%	4.5%
20~29세	414,469	132,528	33,169	115,883	29,322	103,567
	24.4%	29.1%	19.1%	81.3%	8.5%	17.9%

- 북한이탈주민('21년): 739명 (10대 후반 고등학교 재학생/KEDI), 3,672명 (20대/통일부)

- **후기청소년의 정확한 규모 파악 불가, 통일된 국가 통계시스템 구축 필요**
- **외국인 주민 통계 중 20-29세 연령의 결혼이민자 집단을 청소년지원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을지 고민**
- **후기청소년의 지원정책은 시계열상, 성장과정, 생애주기의 흐름을 고려하여야 함. 10-19세 집단의 특징도 고려**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

- 기준 1. 본인의 출생지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
  2. 부모의 배경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출처 : 양계민 (2019)

구분		포함 대상 및 특성
국제결혼가정자녀	①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	-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 - 국내 출생자이며 한국인
	② 국외출생 (중도입국청소년)	-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 - 외국 출생자로 어느 정도 성장 후 한국 입국 - 귀화를 통한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모두 존재
외국인가정자녀	③ 국내출생	- 부모 모두 외국 국적 - 본인국적 외국 - 미등록, 무국적자, 난민, 유학생자녀
	④ 국외출생 (중도입국청소년)	- 부모 모두 외국 국적 - 본인국적 외국 - 미등록, 난민, 유학생
탈북청소년	⑤ 남한출생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
	⑥ 제3국출생	- 부모 중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외국인 - 남한, 북한 이외의 제3국에서 출생 -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범주화되기도 함
	⑦ 북한출생	- 북한에서 출생 후 탈북한 청소년

- **후기 이주배경청소년(19-24세)은 다음의 7가지 범주에 모두 해당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후기청소년기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동일한 집단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국내/국외출생에 따라서 다른 지원내용이 수립될 수 있다.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징

- 국외출생

- 체류의 불안정성
- 언어장벽, 한국사회적응
- 가정 내 갈등 및 불안정성
- 교육공백 등

- 국내출생

- 정체성의 혼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
- 가정 내 갈등 및 불안정성 (부모의 체류자격 문제 등)
- 저소득층의 경우, 학습부진, 왕따, 학교생활의 어려움

-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발달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 분석 (양계민 외, 2020. p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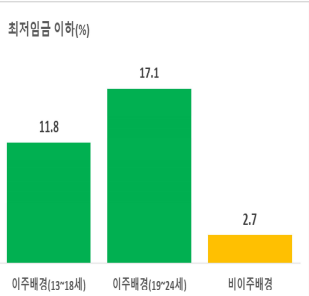
1) 고등교육의 기회와 성취
2) 노동시장의 진출
3)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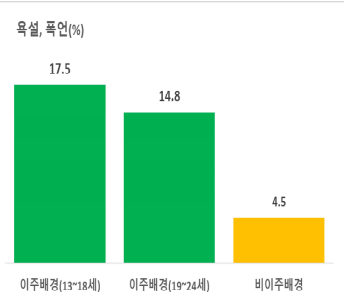
-> 이주의 맥락, 부모 출신국, 민족적 특성, 그밖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의 고등교육 성취 및 노동시장의 진출에 대해서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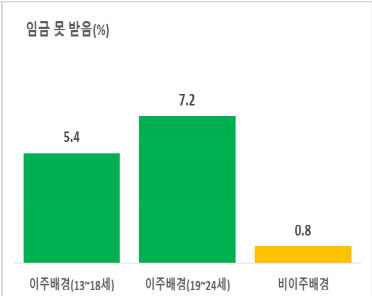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

-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2021) 실시
  - 조사대상: 한국거주 9-24세 이주배경청소년 4,078명
  - 조사내용: 건강,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 사회인식, 학습과 활동, 진로 및 직업탐색, 사회진입 및 이행, 코로나 19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 이주배경의 특성, 지원정책
  - 조사 결과:

* 19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의 경우 19세 미만 집단에 비해,
신체적, 심리적 건강수준, 생활만족도, 사회적지지체계가 낮음.
스트레스 수준은 높고 차별경험이 많음.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특히 노동현장에서 욕설 및 폭언,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경험, 혹은 임금을 못 받은 경험도 있음.







- 구체적으로 현재 재단에서 수행하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기청소년기 지원정책을 고려할 때 미흡한 점,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

1.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센터 운영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설립 근거**

- 이주배경청소년의 조속한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설립, 비영리 재단법인 (민법 제 32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에 근거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 수행

□ **사업내용**

① 교육지원: 한국어교육, 진로교육 및 탈북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② 심리정서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상담통역지원사 운영 및 심리사회적응검사 보급

③ 인식개선 사업: 일반청소년 대상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제공

④ 전문가양성 사업: 유관기관 실무자·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

⑤ 기초연구, 정책제언 ,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등

⑥ 그 밖의 장학금 지원 사업 (외부지원사업)

2. **자치단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2020-현재):** 안산(21'까지), 화성, 시흥, 김해

- (목적) 이주민 밀집지역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체계 마련,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추진
- (지원사업) 민·관·학 협의체 운영, 맞춤형 서비스(한국어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등)

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주요 기능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중앙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교육지원 : 언어와 사회적응교육, 학업 지원

1. 한국어 교육지원
 -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확대 (전국 총 28개소)
  : 일반형(한국어, 생활적응, 진학준비 교육) 23개소
  : 진로형(진로탐색, 진로설계) 5개소
 - 사회적응특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사회적응교육: 탈북청소년 사회입문 프로그램 운영
  : 비교문화체험학습 (입국초기/ 통일부 하나원과 협력)
  : 미래를 향한 한걸음 (성, 인권, 건강, 진로 관련 교육)

3. 학습지원
  : 안정적인 학업수행을 위한 장학금 지원(외부지원사업)

- **후기청소년기를 고려하여 연령과 유형별 특성에 따른 한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초학습지원 지원이 필요함.**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1. 상담 및 심리·치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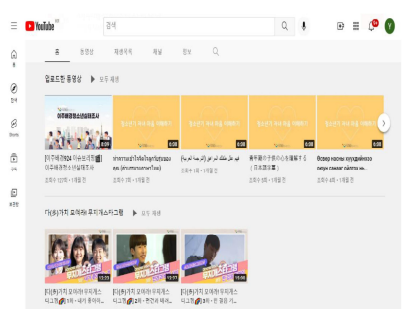
 - 상담 및 사례관리
  : 개인/집단, 대면/비대면, 찾아가는 상담, 부모상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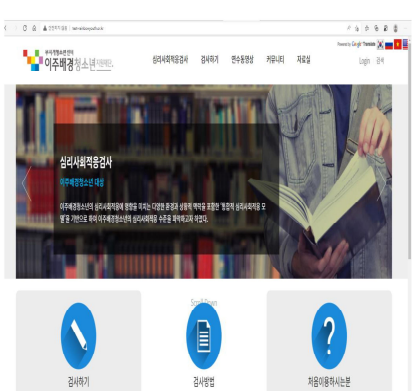
 - 상담체계구축
  : 심리사회적응검사 보급 (온라인)
  : (심리)상담통역지원사 양성 및 보급 (중국, 베트남, 러시아, 몽골어)
  : 위촉직 상담사 전국 배치, 전문상담 위탁기관 운영 지원
  : 심리상담을 위한 전문기관 정보제공, 연계

2. 가족 관계 회복 및 아동 돌봄 (지역전문기관 연계)
 - 부모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 지역내 전문기관을 통한 돌봄교실 등 정보제공

- **'상담'을 3가지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음.**
  1) Counseling(심리상담) : 개인/집단/부모상담
  2) Consulting(정보제공) :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3) Coordinating(자원연계) : 지역기관 연계

- **심리상담의 경우 대상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후기청소년들이 부모나 영케어러(young carer)가 될 경우를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전문기관과 연계, 협력)**





자립지원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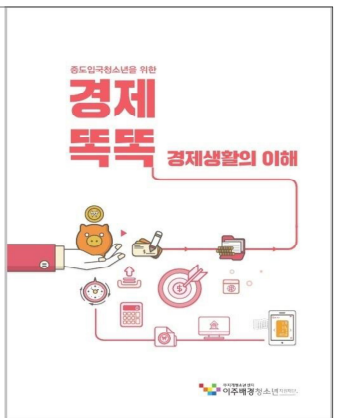
1. 진학(진로), 취업 컨설팅 지원
 - 진로발달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제공 (진로탐색, 설계, 진로선택 및 진입 등)
 - 진학, 취업 및 창업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필요
 - 고등교육기관, 직업교육기관, 취업 등 정보제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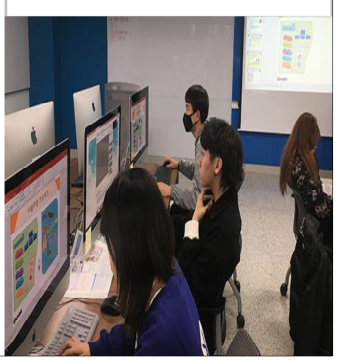
2. 노동인권 관련 법률상담 및 구제창구 마련 필요
 - 노동현장에서 받는 차별,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3. 자립역량 강화 교육 필요
 - 직장조직문화, 군대 문화 등에 대한 이해교육
 - 노동법 교육 등

4. 이주배경청소년 건강지원 필요
 -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의료비 (구강 검사 포함) 등 지원

* 진로(진학), 취업 지원 관련 유관기관, 관계부처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
ex)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페키지의 참여자격 조건 완화(체류조건 고려 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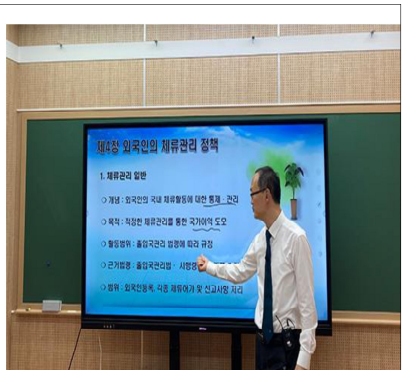


사회통합지원 (전문가양성 및 보급, 인식개선)

1.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인력 양성 및 보급
 1) 유관기관 실무자 연수 (100명)
 2) 예비청소년지도자(대학생) 교육 (150명)
 3)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전문연수 실시 (약 4,000명 예상)
 4) 상담통역사(20명), 청소년다문화감수성 강사 등 양성

2. 청소년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 대상: 청소년(초등고학년 및 중등 전 학년,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령기의 청소년)
 - 다양성 인식, 공감, 소통, 협력, 반차별, 반편견, 세계시민성 등 다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 교육실시
 - 2022년 전국 58개 초·중등학교 및 유관기관. 총 4,400명 실시예정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차별대응 및 권리증진 교육이 필요함.
* 인식개선 교육 대상자 확대 필요함.
 : 공무원, 직장인, 군대, 고용자 등 사회전반의 일반인으로 대상확대
 : 일반인 대상 캠페인 혹은 다양한 방식의 교육콘텐츠 개발 필요



기초연구 및 정책제언

1.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2021)

- 조사대상: 한국거주 9-24세 이주배경청소년 4,078명
- 조사내용: 건강,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 사회인식, 학습과 활 진로 및 직업탐색, 사회진입 및 이행, 코로나 19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 이주배경의 특성, 지원정책

2.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연구

-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사회적응척도 개발 (2020-2021)
- 청소년지도자 다문화이해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2020)
- 레인보우스쿨 특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및 교사 매뉴얼) (2020) 등

3. 이주배경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사업
- <이슈브리프 924> 발간 연 3회
- 온라인 정책이슈 소개 <이슈브리핑> 연 3회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2021)

***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고, 후속연구로서 후기이주배경청소년의 심층적 실태파악 및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는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함 (예산확보).**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지원정책 방향 및 과제

1. 이주배경청소년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한 국가 통계 구축 필요
- 범주, 용어 등 통일
- 후기청소년기 연령, 미등록 청소년 등 정확한 규모 파악

2.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내 유형별 특징에 따른 다양성 고려
- 국내/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북한/남한/제3국출생 청소년 등

3.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정책 방안 모색은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이해
- 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이 저학령, 저연령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후기 청소년기 연령 대상의 지원 내용 확대가 필요
- 고등교육 기회 및 진입, 노동시장 진출 및 적응 등의 자립 지원 방안 모색

4. 후기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 실태조사와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 발굴을 위한 연구 필요
- 전체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의 정례화
- 후기 청소년의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발굴 연구 필요

ex) 후기 청소년 취업 시 비자, 체류조건 등 법적인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지원방안 연구
노동현장의 생활실태, 병영 시간 군생활에서의 차별 및 문화적응 실태 조사 등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김지경(2015).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 하는가?: 정책대상으로서의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중요성 및 통합적 지원정책의 필요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2020).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0-R13.

다문화청소년 교육의 방향과 과제: 평생교육 관점의 정책 접근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다문화청소년 교육의 방향과 과제: 평생교육 관점의 정책 접근[1)]

김진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서두: 질문과 주장

필자는 이 발표문에서 제기하는 질문과 주장을 서두에서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다문화청소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여기서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필자는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다양성의 자원'을 가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교육적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 배움을 이어가는 존재이다. 학습행위는 정규학교에서만, 특정 연령대의 학습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문화청소년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들 스스로 평생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재의 교육 정책 역시 초-중-고라는 10대의 학령기 단계에서 툭 끊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종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다문화청소년과 평생교육: 왜 평생교육적 접근이 중요한가?

평생교육은 모든 개인과 조직, 공동체의 학습세계와 학습경험이 사회적 맥락에 놓여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평생교육 체제의 사회적 맥락 역시 재구조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계획 마스터 플랜의 100대 과제 중 51번에서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항목에 다문화·탈북 학생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질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 혹은 사회구성원도 적극적 시민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100세 시대의 평생교육이라는 학습사회의 비전을 실현하는 길 위에서, 다양한 출신 배경, 이주 경험, 이질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 사회구성원이 배제될 수 있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국가 정책과 이론 연구에서 주목받았던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다문화학생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다문화배경 청년[2)]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동안 **성인 초기에 진입한 다문화 시민 2세대인 청년들에 대한 평생교육 연구와 논의는 많지 않았다**(윤형준, 2019). 그러나 현실의 다문화배경 청년들은 국**내 출생이든, 중도입국 배경이든 10대 청소년기를 지나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펼치고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기획하며 꾸려가는 시점**에 있다. 다문화배경 청년이 평생교육을 통해 자기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으로

---

1) 발표자가 연구책임을 맡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연구보고 RR 2020-19)를 활용하여 발표문을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2020년 7개월간 수행된 질적 연구
○ 현장 단위: 4개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 32명 심층면담: 20명의 다문화배경 청년 + 12명의 지역 현장 활동가
○ 다문화청년 범주(국내 출생 및 중도입국 배경), 외국인 노동자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 및 결혼이주민 제외
○ 국적다양성: 필리핀, 과테말라, 중국, 베트남 등),
○ 청년연령: 만 19세~ 34세(실제 면담자: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2) 이 발표문에서는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다문화배경 청년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자 한다.

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생애발달 단계에 맞는 평생교육 지원 체제를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기에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성인기에 접어든 다문화배경 청년들의 학습권 보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방안을 본격적인 의제**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 새롭게 대두하는 학습주체로서 다문화청년과 평생교육

다문화배경 청년은 의무교육 학령기를 벗어나 성인 초기에 들어선 학습자로서, 인종적, 민족적, 국적으로 다양성을 가진 집단이다. 다문화배경 청년들에 대한 관심은 이들 역시 평생학습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직업 획득 및 자기 개발과 같은 성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는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Guo, 2010). 그러나 한국에서 '다문화배경 청년'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 정의나 범용적 활용이 일관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간 **다문화정책의 방향에서도 성인기에 접어든 청년은 주목받지 않았고, 사회 전반의 관심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Bodigal, 2019). 다문화 관련 통계 등도 이들 청년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기에는 미비한 상황에서 일부 연구와 미디어를 통해 이들이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해 우려가 간간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2세대를 비롯한 다문화배경 청년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정책 대응과 학술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양계민 외, 2020). 먼저 다문화배경 청년 개념에서 '청년'의 범위를 어디까지 상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와 관련된 개념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청년의 정의 역시 법률마다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제3조)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는 연령 규정을 준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다문화배경 청년의 내용적 범주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청소년'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출생·인지·귀화에 의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녀를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19).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배경 청년은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정책 범주와 실천 과제를 고려하여,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출신' 배경을 가진 청년으로 범주를 한정하고자 한다. 기타 귀화자 가족 자녀와 외국인 노동자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과 이주노동자, 유학생은 또 다른 지류의 범주이므로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종합하면, 한국인과 결혼이주민 사이에서 성장한 '국내출생 청년'과 한국인과 재혼한 결혼이주민이 본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초청하여 10대 전후에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청년' 가운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속하는 연령대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문화배경 청년이 된다.

그동안 평생교육 정책 영역에서도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기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은 부족**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도 언어 발달지원이나, 초기 발달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자녀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김이선 외, 2016). 한국의 다문화 인구 대부분이 유학생,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로 이루어져 있어 다문화청년에 초점을 둔 교육 실태 조사나 이들의 교육 요구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우며 다문화 성인과 관련된 연구도 부족하다(윤형준, 2019, pp. 370-371). 그나마, 평생교육 관점에서 이주민에 대해 수행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주민 당사자나 가족 구성원, 난민, 또는 관련 기관의 교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심층면담조사, 혹은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연구들이 있다(김소정, 2012; 김정희·최은수, 2012; 박정현·이병준, 2017; 김진희,

2018; 이로미·김진희, 2020).이 같은 연구들에서 다문화배경 청년을 이주배경을 가진 새로운 성인학습자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성장 주체로서 이주민을 포용하는 체제에 대한 논의는 풍성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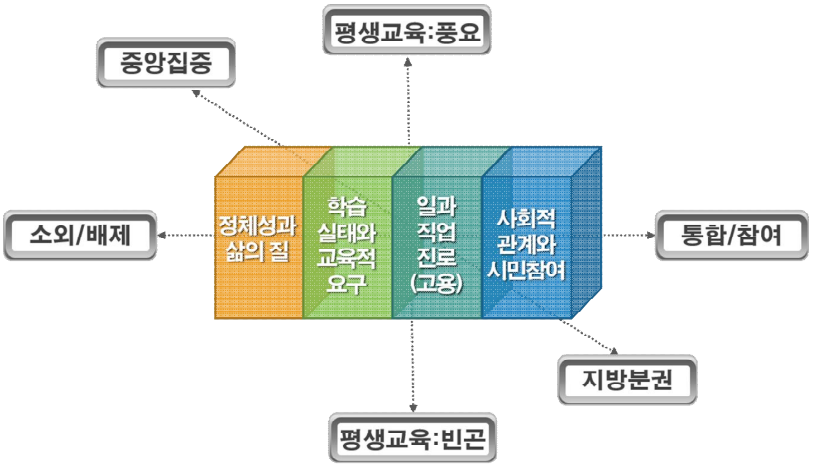
다문화 배경을 갖게 된 1.5세대, 2세대라 할 수 있는 청년기로 진입한 성인학습자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것과 반대로, **다문화 2세대의 성장에 따라 정책 대상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 결혼이민자 러시(rush) 기간에 혼인한 부모 세대가 일종의 다문화 자녀 베이비붐을 형성했는데, 이 시기에 태어난 다문화 2세대가 성장하면서 최근 다문화 2세대의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다문화 2세대 중 성인 연령층인 18세 이상인 다문화 2세대 인구수는 21,968명으로 전체 다문화 2세대 인구의 8.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이후인 2023년에는 22.7%로 7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 2019). 이러한 다문화구성원의 증폭과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거대한 추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 생애적 관점에서 볼 때 이주민에 대한 지원과 역량 강화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선행연구들은 다문화배경 청년들이 평생학습담론과 정책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며, 이들을 포용하는 평생교육의 지평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평생교육은 이론적으로 공정하고 열린 교육의 기회 제공을 통해서 모든 이를 삶의 주체로서 고양시키고 자립적 기반을 확충하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전 생애에 걸쳐서 제공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Guo, 2010). 평생교육 담론에 담긴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라는 관점은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존의 중요성을 함의한다(Jarvis, 2010). 다문화배경 청년을 위한 평생교육의 지원이 더욱 중요한 것은 **청년기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속적인 자기 개발, 노동과 고용 역량 제고는 이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와 산업적 영향력이 다른 어느 계층의 학습자와 비견하더라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배경 청년을 이해하고 평생학습자로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론과 제 담론을 참고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진이 제시한 다문화배경 청년을 위한 평생교육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1) 정체성과 삶의 질
(2) 학습 실태와 교육적 요구
(3) 일, 직업, 진로(고용)
(4) 사회적 관계와 시민참여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들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도 4개의 틀에서 분류하고 재구조화하였다.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분석 틀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특징과 쟁점 개괄

국내출생 다문화청년과 중도입국 청년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가장 뚜렷한 공통점은 '어디에 자신이 서있는지'를 질문하며 '경계선'에 있다는 점이다(sense of social belonging). 자기정체성과 삶의 질 측면에서의 우려는 직업세계 입성 및 시민참여 문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from identity formation- civic participation).

한편, 교육제도의 참여 기회 및 접근성 측면에서 실질적 차별은 해소되었다. 그렇지만 대학교육에서도 실질적 역량 강화를 하고, 사회적 인간관계를 맺는 질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문화적 자원은 여전히 궁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다문화배경 청년 내부에서도 소득, 자산, 교육, 주거, 문화 등 다차원적 영역에 걸쳐 불평등이 재생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기 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교육 지원이 특히 초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 방향은 진로와 일, 직장 세계로 이행되면서 시민으로 나아가는 큰 그림을 채워 나가는 것이다. 다문화로 인해서 위축감과 복합적인 제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 나가기 위해서 장벽을 허무는 자기 동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직업 세계에서 다문화 감수성을 필수적으로 탑재하는 문화적 운동이 필요하다.

여전히 다문화배경 청년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성장하겠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재협상'의 과정을 겪고 있다. 정체성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크고 작은 "인간관계"라 할 수 있다. **다문화청년들이 사회적 주변부화(marginalization)를 겪지 않도록 구조적 불평등의 극복, 시민참여의 중요성, 다양성의 자원을 가진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되새기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 유관 정책: 정책 기조 및 정책 방안

정책 연구로서 본 연구는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정책 추진 관점과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공평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정의'를 실현하는 관점**, 둘째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생산 가능 인력의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 **다문화배경 청년이 '인적자원'이라는 관점**, 셋째 다문화 사회로서 전환을 대비하고 이주민과 공존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다문화배경 청년이 '민주시민'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관점**, 넷째 글로벌 사회를 무대로 **지구촌과 가교가 되는 '세계시민'이라는 관점**, 마지막으로 다섯째 급격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으로 **'다양성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및 정책 제언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였다. 다문화배경 청년에게도 **평생에 걸쳐 양질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존엄한 삶, 잠재성 발휘, 행복한 여가의 가치가 정책 추진의 철학**에 녹아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가 수준에서 다문화배경 청년에 대한 정책이 부재했으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틀에 따라서 총 4대 영역(① 정체성과 삶의 질, ② 학습실태와 교육적 요구, ③ 일, 직업, 진로(고용), ④ 사회적 관계와 시민참여)의 19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지원 정책 방안 및 실천 과제
(특히 우선순위 과제 밑줄 표시)

	영역	방안	실천 과제
다문화 배경 청년의 평생 교육 요구	1. 정체성·삶의 질	1-1. 기초문해 및 생활문해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문해교육 기회와 교육정보 제공
			문해교육 기관 지정 및 교육 제공
			다양한 지원기관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중등학력보완 교육 연계
		1-2. 청년의 간문화이해 역량 제고	국가평생진흥원의 사업 추진
			지자체의 다문화 학습 공동체 지원을 위한 체계구축
			개별 국가 대사관 문화교육 체계구축
		1-3.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조기 개입 차원의 다문화배경 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상담서비스 확대
			통합적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다문화배경 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사업 지원
			대학 상담센터의 맞춤형 상담서비스 운영
		1-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세계 속 멘토링 지원	다문화배경 청년 지원을 위한 멘토 풀 구축
			다문화배경 청년 대상 멘토링 체계 구축
			다문화배경 청년 대상 멘토링 서비스 제공
			다문화배경 청년의 멘토 참여 독려 제도적 지원
	2. 학습생활·교육활동	2-1. 생애발달 단계에 맞는 평생교육 지원 강화	생애 과업과 교육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범부처,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 청년 사회참여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사업 운영
			지역평생학습관의 다문화배경 청년 평생학습 지원 역할 수행
		2-2. 중등·고등교육 학력 보완 기회 확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중등교육 기회 제공
			중등학력 수준의 대안학교 운영·지원
			전문대에서 산업체와 연계한 특화된 전공 운영
			대학평생교육 체제를 활용한 문호 개방 및 지원책 마련
			선취업 후진학 트랙에서 다문화배경 청년 흡수
			보편적인 '유급학습휴가제'의 실질적 작동
		2-3. 평생교육 정보 접근성 및 참여 제고	시도별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범부처 차원의 원스톱 학습정보포털 운영
			지역평생학습관의 다문화배경 청년 평생학습 지원 역할 수행
			각종 청년네트워크에 다문화배경 청년 연계

	영역	방안	실천 과제
		2-4. 교육훈련/ 사회서비스 관계자 다문화인식 제고	중앙부처 차원의 전문가 보수교육과정 및 지원 매뉴얼 개발
			지자체 차원의 전문가 보수교육과정 및 지원매뉴얼 개발
			교육 실시 및 모니터링
	3. 일/직업·진로	3-1. 직업능력개발 교육 확대	다문화배경 청년 직업훈련방안 연구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역 전문대를 활용한 직업교육 및 훈련 개발 및 실시
			직업교육 및 훈련 평가 및 개선
		3-2. 이중언어 강점을 활용한 취업 지원	대학 취업지원센터 관련 프로그램 확충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에 기반한 인력육성 사업
		3-3. 지역특화 취업·일자리 연계 지원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다문화배경 청년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다문화배경 청년지원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청년 특화 직업 창출 (지방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3-4. 불안전 노동시장 탈피를 위한 재정지원	다문화배경 청년 교육, 직업훈련 중 재정지원(생활비/복지 비용)
			청년센터/사회적경제센터 창업지원: 지역청년/귀농귀촌청년/다문화배경 청년 공동사업 (지역특화 사업 인큐베이팅)
			다문화배경 청년의 자립을 위한 생산적 사회복지체제 구축
		3-5. 일자리/직업/진로에 대한 지역별 통합서비스 체제 구축	교육부 진로교육 및 진로개발 사업에 다문화배경 청년 프로그램 반영 및 지역평생학습관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 사업에 다문화배경 청년 프로그램 확충 및 지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통한 안내 및 지원
			지자체 청년사업에 다문화배경 청년 참여 기획 확대 및 청년네트워크에 다문화배경 청년 연계
		3-6. 일터에서의 이주민 차별 금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인식제고	차별 금지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다문화교육의 법정의무교육화를 위한 법안 마련
			사업장을 위한 다문화교육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직장인 괴롭힘 방지 제도 개선

	영역	방안	실천 과제
	4. 사회관계·시민참여	4-1.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 및 소속감 제고	자발적연대 네트워크 형성
			청년대상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에 다문화배경 청년 참여 유도
		4-2. 지역 단위 다문화배경 청년의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다문화배경 청년을 위한 사회복지 요구 파악
			지역 단위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다문화배경 청년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3. 지역사회 다양성 관리 및 열린생태계 제도화	지역청년 대표단에 다문화배경 청년 참여,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지역 공공선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활동
			다문화 사회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 교육
			기초지역 단위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참여
		4-4. 지역 주민의 다문화 인식 제고와 조례 개정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홍보 방법 다양화
			지자체 조례 개정
		4-5. 다문화배경 청년을 고려한 이민정책 종합 거버넌스 구축	다문화배경 청년을 고려한 통합 이민관리법 제정
			독립기구로서 이민청 설립
			행정 안전부의 지역거점 이민 정책

□ 정책 지원 방향에서 고려할 점: 미래를 향한 중장기적 관점

지금까지 다문화배경 청년을 위한 평생교육 관점의 정책 방안과 실천과제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모든 정책 방안을 한 번에 실현할 수 없다. 우선순위와 선결 과제를 전략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발표문을 마무리하면서 필자는 다시 한 번 큰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저출생으로 인구절벽 위기에 놓여 있는 한국사회는 이미 중요한 선택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민, 이주를 통한 인구 구성체의 변화는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오는 대 전환이 될 것이다. 이민 논제를 꺼내는 것조차 골치 아프다는 많은 정책 입안가들에게 묻고자 한다. 우리 안에 이미 다양성의 폭발적인 자원을 가진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대승적으로 연결 짓는 미래 백년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우리사회에서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사회적 성장 동력으로서 잠재력을 발휘하고,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한국 사회 내 다양성의 자본을 확대하는데 평생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한 연구에서 만난 20대의 다문화배경 청년들은 살아오면서 '다문화' 배경의 영향력을 크고 작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누군가는 자신의 배경을 활용하여 돌파구를 찾거나 의미 있는 학습 관계를 확장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현재 한국 사회의 일반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 뿐 아니라 다문화배경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국내 출생이든, 중도입국이든, 다문화배경 청년이 청년 중에서도 **가족 내 문화적 자본, 경제적 수준, 사회적 네트워크 등 보다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다문화배경이라는 이유로 경험한 부정적 시선과 배제 속에서 관계 형성이 위축되고 심리적으로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언어적 제약과 직업능력 개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직업시장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술에 있어서도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연구진은 이를 '복합적 취약성'의 고리** 안에 묶여 있다는 현상을 짚어냈다.

한편 국내 출생과 중도입국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의 종류와 형태도 상이한 측면이 드러났다. 현장에서 만난 대다수의 중도입국 다문화배경 청년들은 아동·청소년기에 국가와 언어, 그리고 문화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면서 중등학력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국내 출생 청년들로 다문화로 인한 사회적 시선과 부정적 경험으로 학습정보나 관계를 넓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학습생활은 단조롭게 갇혀있거나 학습관계망도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직장인도 폭넓은 정보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기보다는, 좁고 친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편중성이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이나 청소년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정책적 고려 대상으로 언급이나마 되고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일정 정도 보호를 받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아무런 보호막 없이 사회에 내던져진 상황**에 놓인다. 또한 청소년기부터 누적되어 온 문제가 겹쳐서 심화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 **다문화배경 청년의 문제는 '이주민' 혹은 '청년층'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들은 본격적인 성인기를 준비하는 청년기의 학습자들로서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역량 개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인학습자의 학습생활과 요구도를 이해하고, 이들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지만 학습자로서 각자의 필요에 맞게 자기 주도적으로 관련 경험을 쌓고, 유익한 정보 채널을 활용하면서 삶의 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궁극적으로 다문화배경 청년들이 학습생활과 교육적 필요를 반영한 유기적이고 포괄적인 평생교육 지원체제가 요청된다. 특히 중도에 입국한 다문화배경 청년들이 **한국어 교육 및 중등교육 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성인기로 진입하고 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청년기에도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학령기에 놓친 교육을 보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배경으로 인한 특수한 학습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다문화배경의 어려움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망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정책 제언

앞으로 생애사적 맥락에서 다문화배경 청년의 하루하루 일상과 연결된 관계망, 학습경험을 보다 폭넓은 데이터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다문화배경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연결된 학습기회를 지역 공동체 속에서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 다문화배경 청년들은 개별 시민이다. 그 첫 단추로서 **지역 내 공동체 학습 지원망을 확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들 청년들은 인식하고, 행위하고, 경험하고, 참여하는 개인적 경험을 쌓고, 지역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스스로 학습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선명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깊이 연결되지 않는, 낯선 존재**로 인식한다.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이들이 다양한 학습 조직과 동아리에 참가하여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적 관계를 맺고, 지역 내 다양성에 대한 학습 자본을 구축해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토대들이 평생에 걸쳐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내적인 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배경 학습자들의 개별 요구 사항, 관심, 희망 진로에 맞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열린 통합지원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학습자 지원 통합서비스는 새로운 사회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황과 다문화배경 청년들 자신의 니즈에 맞게 그들의 삶과 학습 및 일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융합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장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각자도생하던 청년들이 일단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고, **진로, 취업,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찾고, 다른 청년들과 모여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있다면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리에서 지역의 다문화배경 청년들에게 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며 각자의 인생계획을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취업이나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훈련 정보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상과 연계된 학습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무형식, 비형식차원의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 유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사회적 참여 여건도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평생교육은 시민학습 차원에서 다문화배경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 등 포용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보루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배움을 통해서 소외를 극복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연대의식**을 함께 키워가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김소정(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희망과 평생교육요구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이선, 최윤정, 동제연, 신현옥(2016).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연구**(MYF16-13-연).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김정희, 최은수(2012). 다문화 출신 이주자의 한국 사회 직업획득과정에서 제공되는 평생교육탐색. **평생교육·HRD연구, 8**(2), 79-103.

김진희(2018). **다문화교육과 평생교육**. 박영스토리

박정현, 이병준(2017). 다문화가정을 위한 평생교육 요구조사 연구 - 경상남도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성인계속교육연구, 8**(1), 51-75.

양계민, 변수정, 조혜영, 김이선, 이민영 외(2020).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 연구: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 20-06-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연구보고 2019-01). 서울: 여성가족부.

윤형준(2019). 다문화 2세대의 성인 초기 발달과업 수행에 대한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인문사회21, 10**(6), 369-378.

이로미, 김진희(2020).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시민권과 평생학습권에 대한 초국적 접근, **다문화 사회연구, 13**(2), 249-278

Bodigal, B(2019). **다문화청년의 성장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서울특별시 다문화 정책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Guo, S. (2010). Toward recognitive justice: emerging trends and challenges in transnational migration and lifelong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9*, 149-167.

Jarvis, P. (2010). *Adult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지방자치단체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사례와 함의

(**이혜숙**, 안산시청 청년정책과 과장)

지방자치단체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사례와 함의
-안산시 청년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이혜숙(안산시청 청년정책과 과장)

1. 들어가기

✔ "유럽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Intercultural city·ICC)에 지정[3]" (2020.2.13.)

✔ "2022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다문화포용도시 부문 대상 수상" (2021.4.19.)

이것은 다문화 대표도시이며 이주민 누구에게나 키다리아저씨이기를 바라는 안산시의 자랑스러운 소식이다. '다문화도시'라는 이미지를 '상호문화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불리워지기를 바라는 안산시의 열망이기도 하다. 외국인주민 비율이 내국인의 12.9%, 외국인 및 동포 아동·청소년이 내국인 아동·청소년의 14%를 차지하며 2008년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 외국인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4].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계 생산이나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오늘 논의의 대상인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즉 초기 다문화(이주민)배경 청년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그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9일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패널로 참여시켜 한국에 거주하며 느낀 고민과 어려움을 토크쇼 형식의 '우리 곁의 이주배경청소년 특강'을 개최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런 자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청소년 관련 기관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대부분 중도입국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물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은 안산에서 후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초기 청년으로 접어들고 있는 후기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우리시의 시책을 찾아보면서 아직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구나, 분명히 청년으로 진입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았다는 반성을 하면서 이 포럼자리에 임하고자 한다.

논의를 위해 먼저 후기다문화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시 청년정

---

3) 2008년부터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EU)이 문화 다양성 증진 등을 위해 확산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안산시 외에 현재 44개국 136개 도시가 지정됐다. 상호문화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이주민과 원주민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교류 하는 도시를 말한다. 안산시의 상호문화도시 지정은 국내에서 첫 번째이며 아시아에서 두 번째임.

4)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등록외국인은 만여명 감소하였으나 외국국적동포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 등록외국인 10,401명 감소 (20.2월 56,925명 → 22.6월 46,524명)
* 외국국적동포 6,066명 증가 (20.2월 31,203명 → 22.6월 37,269명)
* 체류자격별로 외국인근로자의 감소 뚜렷 12,445명 감소 (20.2월 28,213명 → 22.6월 15,768명)

책 중 실제로 다문화청년과 함께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다문화청년을 위한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후기 다문화청소년 및 청년정책의 현황 및 실태

그간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다문화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초·중등 학령기의 아동 및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이들 대부분 제도권 내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고 매년 통계생산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와는 다르게 또 한 축으로 외국인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 2012.2월 전부개정되면서 법제화된 용어이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르면 ①「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②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써 10년 전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와 지자체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가 ②호의 그 밖의 국내 이주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은 기껏해야 2년 남짓 정도이며 그간은 지자체와 각종 재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책여건이 이러하다보니 초기 성인기에 진입하는 다문화 및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갖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실제로 청년의 관점에서 다문화 및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연구 문헌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2020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이라는 연구보고가 현재까지는 정부보고서로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배경에는 그간 한국에서 '청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타 지자체들에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안산시도 2017년 안산시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우리시 보다 1년 앞서 조례가 제정된 시흥시 청년기본 조례는 지자체 중 주민발의에 의해 조례 제정 공포된 첫 사례로 무엇보다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나서 주민청구 방식의 조례제정운동을 벌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청년들이 앞장서고 지자체가 밀어준 시흥시 사례는 대한민국 청년활동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과 청년 지원 사업들이 국가보다 지자체에서 활발한 논의되면서 지자체의 조례가 법률을 만들어낸 의미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8월 5일 시행되었고, 지난 12월 23일에는 '제1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21년~`25년)'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청년기본법」을 통해 청년 의제가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2016년 신보라의원등 122인의 의원발의로 발의된 청년기본법이 4년여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2004년「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우리 사회는 청년 문제를 최저임금과 실업, 고용환경, 비정규직 등 단순히 일자리와 관련해 생각해왔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청년' 정책은 경제활동 초기 진입단계를 지원하는 것에 국한되어 올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왔다.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본이 몰려있는 서울(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지역 불균형문제는 서울 청년의 삶과 지방 청년의 삶의 격차를 크게 만

들었다.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여 2020년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이를 근간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2월 전국 지자체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이 시행되어 각 지자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청년정책의 주요정책대상을 표와 같이 구분하면서 대상청년별로 환경분석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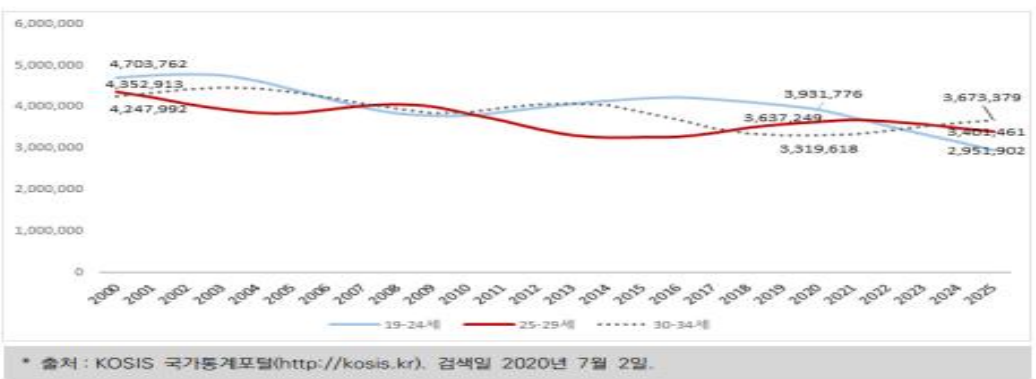
〈표-1. 주요 정책 대상 청년〉

구분	주요 정책 대상 청년	
일반청년	- 전체 청년 - 청년 창업자 및 소상공인	- 청년 취업자 - 대학생
취약계층 청년	- 미취업 청년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단독가구 및 주거 취약 청년 - 이주배경 및 북한이탈 청년 - 장애를 가진 청년	-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 청년 니트 및 고립청년 - 저소득 청년 - 미혼모·미혼부·한부모 청년

출처: 김기헌 외(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p.20). 세종: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인구[5]는 2020년 현재 1,088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21%를 차지하며 이 중 남성은 577만 명, 여성은 511만 명으로 남성이 약 66만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구를 연령구간별로 19~24세, 25~29세, 30~34세로 세분[6]하여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청년인구는 현재 급격히 감소 중이며 특히 19~24세 인구는 2000년 470만 명에서 2025년 295만 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2. 청년정책 인구 추세(2000~2025)〉



출처: 김기헌 외(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p.21). 세종: 국무조정실.

5) 청년의 연령적 범주는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고 청년기본법에서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허용된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29세 이하, 안산시 청년기본 조례에서는 만 15~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창업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청년을 39세 이하로 보고 있음.

6) 연령구간별 청년정책 수요 △ 19~24세 : 교육(학자금) △ 25~29세 : 취업(양질의 일자리) △ 30~34세 : 결혼·독립(주거·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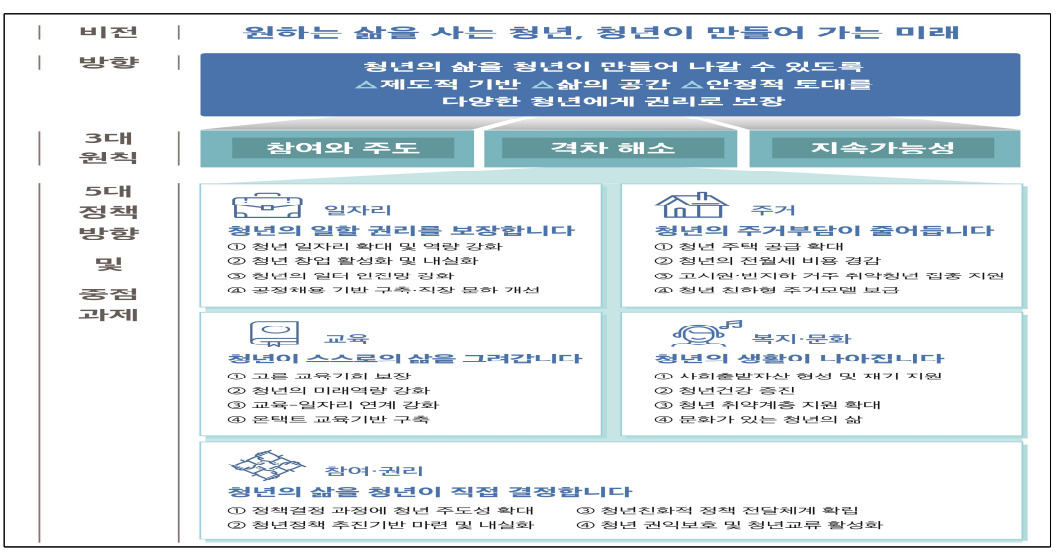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청년의 일반적 특성 및 정책방향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보고서에는 이주배경 및 북한이탈 청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는데 매우 짧게 현황 정도만 다루고 있다.[7)]

〈표-3. 청년정책 인구 추세(2000~2025)〉

현 황	
○ 청년인구는 1,088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21%('20)이며 청년인구 중 남성은 577만명, 여성은 511만 명('20) ○ 청년인구의 거주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52%, 광역시·특별자치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9%, 도·특별자치도(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27%('18) ○ 합계출산율은 0.977명('18) ○ 청년인구(20세-39세) 중 사망자 수는 7,593명이며, 이는 전체 사망자 수의 2.5%('18)	
주요 특성	**정책방향**
① 청년인구는 급격히 감소 중, 특히 19세 인구는 '00년 84만 명에서 '25년 43만 명으로 절반 가량 감소	- 청년 한 명이 매우 소중해 지는 시대를 맞아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역할 증진 필요
②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의 지역소멸 가능성이 우려	- 인구 수도권 집중 현상이 청년의 경우 더 심각해 지역 균형적 관점 필요
③ 국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이며, OECD국가(평균 1.68명) 중 가장 낮음	- 일 · 가정양립을 위한 환경조성 필요
④ 여가중시, 개인중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재산 · 경제력, 화목한 가정, 건강을 중요한 행복 조건으로 생각함	- 경제적 독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일 · 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강화 필요
④ 청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20 – 29세의 17.6%, 30 – 39세의 27.5%가 자살로 사망('18)	- 청년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 강화 필요

출처: 김기헌 외(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p.24). 세종: 국무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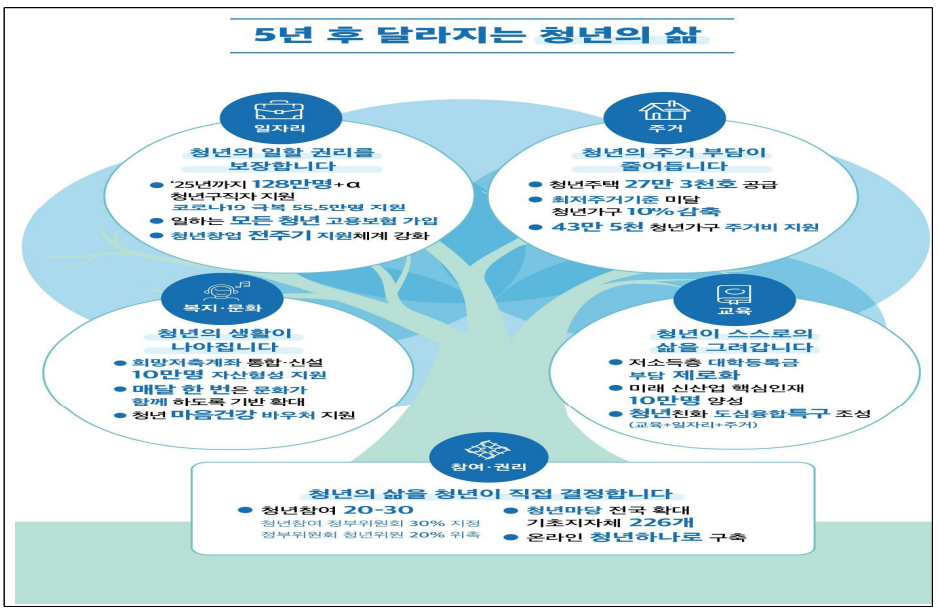
관계부처 합동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방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수립되었고 5개년 계획의 비전과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다.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p.7.

7)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 가구 중 혼인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2009년 15.6%에서 2018년 60.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5대 정책방향에 맞춰 270개 사업을 향후 5년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일자리분야 세부과제 94개, 주거분야 세부과제 24개, 교육분야 세부과제 83개 복지·문화분야 세부과제 37개, 참여·권리분야 세부과제 32개 사업이다.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p.8.

3. 안산시 후기 다문화청소년 및 청년정책 현황

지난 6년간 등록외국인 현황에 따른 안산시 19세 이하 등록외국인의 증가비율은 2015년 대비 2021년 233.3%로, 같은 기간 동안의 전국 19세 이하 등록외국인 증가비율인 72.4%보다 훨씬 더 많은 증가를 보였다. 같은 기간 안산 전체 등록외국인 증가비율이 109.8%인 것에 비하면 119세 이하 외국인아동청소년은 극적인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표-4. 연도별 안산시 외국인 및 동포 자녀 현황(법무부, 연도별 9월말 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9월)
전체 (0~80세이상)	74,568	77,254	80,494	86,023	87,170	83,410	81,908
24세 이하	6,444	7,698	8,453	10,187	11,333	10,928	11,114
19세 이하	3,397	4,544	5,358	6,369	7,467	7,597	7,928
0~4	1,616	2,113	2,353	2,669	3,050	3,051	2,795
5~9	867	1,171	1,464	1,715	2,033	2,146	2,467
10~14	365	554	800	1,037	1,244	1,345	1,499
15~19	549	706	741	948	1,140	1,055	1,167
20~24	3,047	3,154	3,095	3,818	3,866	3,331	3,186

*자료출처 :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2022년 사업계획서

〈표-5. 안산시다문화 및 외국인 아동·청소년 현황〉

○ 연령별 외국인 아동·청소년 현황(19.11월말 기준)

합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11,247	2,987	2,037	1,247	1,127	3,849

○ 학교 재학 대문화 및 외국인 아동·청소년 현황(2019.4.1. 교육청 자료)

구분	전체 학교수	다문화 및 외국인 아동·청소년(7~18세)			
		재학학교 수	학생수		
합계	107	101	4,638		
			국내출생	2,066	2,066(내국인)
			중도입국	289	2,572(외국인)
			외국인근로자	1,223	
			재외동포	1,000	
			기타(난민등)	60	
초	54	53	3,342		
중	29	28	820		
고	24	20	476		

○ (추정) 학교밖 외국인 아동·청소년 현황

학교밖 외국인 아동·청소년 (C+A-B)	7~18세 아동·청소년	
	연령별 외국인 아동·청소년(A)	학교 재학 외국인아동·청소년(B)
799	3,371	2,572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연령대별로 성장 배경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11세 자녀의 경우 국내에서만 성장한 자녀가 49.2%로 가장 많지만,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내 성장 자녀의 비중이 낮아져 18세 이상의 경우 10.3%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18세 이상의 경우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절반에 가까운 42.9%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비율은 93.1%, 재학하지 않는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국내 성장 자녀의 경우 4.5%를 제외한 95.5%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반면, 외국 거주 또는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는 80.8%만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의 경우 33.2%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8)]

8)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김진희 외, 한국교육개발원, 2020년

〈표-6. 다문화가족 자녀의 재학상태 및 교육경험〉

(단위: %, 명)

		국내에서만 성장	외국 거주 및 성장			전체
				외국 거주 경험	외국에서 주로 성장	
계		100.0 (79,141)	100.0 (15,383)	100.0 (8,905)	100.0 (6,478)	100.0 (94,542)
다닌다	소계	95.5	80.8	90.9	66.8	93.1
	초등학교	55.8	32.5	38.3	24.5	52.0
	중학교	21.4	21.4	25.8	15.3	21.4
	고등학교	13.9	18.7	19.9	17.2	14.7
	대학교 이상	4.4	8.2	7.0	9.8	5.0
다니지 않는다		4.5	19.2	9.1	33.2	6.9

출처: 여성가족부, 2019:490

표-5에 만19~24세 연령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은 어림잡아 4천명은 넘는 것으로 보이며 고려인동포 청소년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표-6의 자료와 같이 이들은 외국에서 성장하다 10대 중후반에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의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산시에서 다문화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기관을 설치하여 2016년도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주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는 9~24세 이하 청소년에 집중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전국 난민관련 체류자격 소지자의 5%(난민신청자 1,298명, 인도적 체류 46명, 난민인정자 107명 총 1,451명)가 안산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 난민가정에 대한 지원과 사례관리를 역시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는 이주유형과 이슈의 변화에 맞춰,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포용적인 정책접근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청소년 뿐만아니라 청년기에 접어든 청년들을 위한 자치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청년센터와 교류하며 지역의 청년소식을 공유하고, 신안코아청년몰과도 협약체결하여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역량강화 인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명의 청소년들이 2개월간 다양한 진로체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2017년 청년정책팀을 신설을 시작으로 올 1월1일자로 청년정책과로 확대 개편되어 청년정책, 청년지원, 청년일자리 등 3개팀의 12명의 직원이 청년정책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맞춰 안산시 청년정책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9개사업에 안산시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5~39세 청년인구는 2021.12월말 기준 223,299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점유율은 34.2%로 도내 50만 이상 11개 시 중 3번째로 젊음 도시에 속한다. 청년가구는 60,709가구로 안산시 전체 260,598가구의 23%를 차지하며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가 49.1%, 세대구성가구 47.1%, 비친족가구 2,312가구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년가구의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보증금 있는 월세 36%, 전세 30%, 자가 27% 순이며, 청년 1인가구의 점유형태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51%, 전세 29%, 자가 12% 순으로 청년가구 중 1인가구의 경우 월세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 안산시 청년 취업자수는 130천명으로 고용률 54.2%이

며 실업률은 8.3%로로 경기도 실업률 6.2% 대비 2.1% 높게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 안산시 청년 취업자의 월평균임금은 200~250만원 미만이 24.7%로 가장 높았고, 300~400만원 미만 20.7%, 250~300만원 미만 15.5% 순으로 나타났다. 안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7점으로 나왔으며 청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청년일자리창출이 42.6%, 청년복지 확대(주택, 금융) 24.7%, 취업 및 창업지원 22.6% 순으로 조사되었다.[9)]

안산시 청년정책 주요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대 정책방향	사업명	추진방법	사업량 (명, 개소)	사업예산 (단위:천원)
참여·권리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자체	19명	2,240
참여·권리	안산시 청년활동협의체 운영	자체	39명	26,912
참여·권리	청년공간,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운영	위탁	1개소	370,000
복지·문화	제2회 안산시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	자체	500명	19,000
참여·권리	청년정책토론회	자체	100명	12,000
참여·권리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	자체	60명	4,000
복지·문화	청년기본소득 지급	자체	9,606명	9,606,000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청년활동가 지원)	보조	7명	32,468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안산을 잇(IT)는 인재 육성)	보조	3명	61,500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엄마의 두 번째 출근)	보조	2명	33,376
복지·문화	찾아가는 뮤지컬단 A1 운영	자체	10명	-
일자리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자체	500명	40,000
참여·권리	청년활동공간 발굴 지원사업	자체	20개소	40,000
일자리	복합청년몰 활성화 및 운영	위탁	40점포	200,000
일자리	경기도 청년푸드창업 허브사업 조성	위탁	30명	1,500,000
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보조	2,300명	2,684,000
교육	구직 단념청년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위탁	100명	100,000
일자리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사업 「청년큐브」운영	위탁	3캠프 50기업	1,100,000
일자리	안산시 디지털제조스튜디오 운영	위탁	1개소	300,000
일자리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보조	4개소	81,668
일자리	(가칭)월피동 창업보육센터 건립	보조	1개소	2,390,000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청년 창업가이드 사업)	보조	13개사 3명	161,778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안산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보조	7명	110,000
일자리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업	자체	58명	1,009,454
교육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자체	370명	797,527
일자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위탁	150명	90,000

9) 통계청 자료, 2021 안산시 사회조사

4. 마무리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은 초기 성인기의 다문화 및 이주배경 청년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관점이 아닌 청년의 관점에서 다문화 및 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정책 사례는 사실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다문화 정책들은 주 대상을 아동·청소년이나 결혼이주민으로 설정하여 다문화 및 이주배경 청년은 고려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청년정책에서도 이들에 대한 특수성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 청년들은 대체로 소득, 자산, 교육, 주거, 문화, 건강 등 다차원적 영역에 걸쳐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고 다문화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저출산 국가, 생산가능인력 감소가 시작된 한국에서 다문화 및 이주배경 청년들은 인구의 대안으로 인적자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인적자원이라는 용어를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현재 우리 곁에 이웃으로 살아가는 구성원 즉 주민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 것인가, 누가 누구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다문화 및 이주배경 청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청년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센터 등 통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이주민분과의 기능을 다문화 및 이주배경 청년을 위해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청년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이주배경 청년에게도 적용하여 청년센터에서 한국인 청년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제도내에서 이주배경 청년도 지원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공유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이주민 지원기관의 관계자들이 서로 연계하고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배경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고 청년활동협의체의 분과 중 이주배경 청년분과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청년들이 이주배경 청년들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현재의 사업들 중 이주배경 청년들에게도 지원 가능한 사업이 없지 않을 것이다. 금번 포럼 자료를 준비하면서 자료의 부재와 정책의 부재로 다문화 사회로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성찰하고 이주배경 청년들을 위해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함을 전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김기헌,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권향원 외(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세종: 국무조정실.

김진희, 김경애, 한효정, 김태준 외(2020).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연구보고 RR 2020-19).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2022).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2022년 사업계획서. 내부자료 비공개자료.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연구보고 2019-01). 서울: 여성가족부.

통계청(2021). **2021 안산시 사회조사**. 경기도: 안산시청.

『후기 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후기 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

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다문화 청소년 등 이주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지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데, 토론으로 함께 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부자일 수 있는 저의 질문과 토론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 후기 청소년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은 9-24세인 인구집단으로, 후기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24세 범위의 청소년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기본법」에서는 19-34세인 인구집단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는 정책의 관점에서 후기 청소년은 초기 청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과연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후기 '청소년'으로 보아야 할지, 독립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초기 '청년'으로 보아야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라면 「청소년기본법」제2조에 의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고, 후자라면 「청년기본법」제2조에 의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9세 혹은 24세를 경계로 한 사람의 인생이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어서 연령은 연속적인 개념에서 이해해야 하지만, 후기 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논의의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은 만 24세까지 유효하다는 점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주배경으로 인한 곤란의 경험이 만 25세 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청년의 관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특히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바라볼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될 것입니다.

□ '후기 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의 목표도 재점검해야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지원 정책을 고민하는 정책결정자나 연구자, 실무자의 목표는 이들이 다문화나 이주배경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나 이주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류의 불안정성이나 언어장벽, 정체성 혼란 등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방해 요소에 주목하여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사회통합지원'으로 명명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기 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전달체계에서 이들을 다른 이들과 구별하여 분리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점검해야겠습니다.

□ 이주배경을 갖고 있는 후기 청소년기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고유한 어려움에 대응하는 전

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체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청년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확대되고 있는 청년센터뿐 아니라 후기 청소년기 다문화 청소년이 원할 경우 일지원을 할 수 있는 고용센터 등이 그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케어러가 될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력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사례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사례관리 접근이 유효할 것입니다.

□ 이어서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 중 일부는 이주배경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라기보다 계층에 의한 문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학습부진이나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이 그러합니다. 이주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다른 이들과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주배경 청소년, 혹은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기에 자원이 결핍되거나 부족한 취약성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다름으로 인한 차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자원의 부족이나 결핍을 보완하는 사회보장정책이 작동하겠지만, 후자는 이주배경으로 인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므로 유효한 정책 수단이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권의 관점에서 차별 금지가 유효할 것이고, 이 맥락에서 인식개선사업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이주배경에 의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 맥락에서 인권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에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다양한 차원의 사회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청소년기 이주배경에 의한 차별과 갈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유효할 것입니다.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배경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 및 정부기관과 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발표자료에 제시하신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통계와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개발이 중요합니다. 이미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통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별 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행정통계와 실태조사를 통합하는 DB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무지에 의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을 본인의 출생지와 부모의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개해주셨는데, 국외출생 중도입국청소년 중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들이 경험하는 곤란한 경험과 지원이 궁금합니다.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민숙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민숙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사회의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정착지원, 심리상담, 교육 및 진로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발달단계에 따른 청소년기의 특징뿐만 아니라 출생지(국내/국외 출생)와 한국 체류 기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특성이 다름을 고려할 때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그간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마련에 있어 무엇보다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일관성 있는 통계, 특히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및 학교밖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에서 지적한 통일된 국가 통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이를 반영한 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향후 다문화청소년 대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간 연계 시스템, 중앙과 지차체간 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유관기관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기초연구에서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양성 및 인식개선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다면화된 방법으로 다문화 정책 지원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들의 흩어져있는 역량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은 향후 다문화청소년 정책 및 사업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경우, 아동기 단계와는 다르게 향후 다문화청소년을 사회인으로서 자립하도록 조력하는 진로교육 및 취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간 다문화 관련 정책은 저연령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다문화 인구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면서 청소년기 및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과 노동시장 진출단계를 아우르는 체계화된 정책 지원 역시 한계를 보인다. 또한 후기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이 관심이 높아지며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진로·진학교육 컨텐츠는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 역량을 개발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으며, 관련 전문가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양질의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역량을 고려한 전문화된 진로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구현할 전문가의 양성이 중요하다. 최근 중기 및 후기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진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나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가 활발해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추세로 보인다. 다양한 연구와

파일럿 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한 과제이다.

반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문화청소년 개인에 대한 진로 및 취업교육, 한국어 교육, 상담 등 지원의 수준에 국한되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다양한 문화적 자산과 글로벌 역량를 보유한 다문화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의 역량을 우리 사회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다문화청소년의 자립의 문제를 넘어서는 범사회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지 등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배경과 언어적 다양성을 보유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파악 및 분석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어떠한 산업 분야로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진출하기 유리할지, 그리고 이주배경청소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용이하게 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문화청소년 교육의 방향과 과제: 평생교육 관점의 정책 접근』 토론문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다문화청소년 교육의 방향과 과제: 평생교육 관점의 정책 접근』 토론문

오재호(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발표문에서는 다양한 출신 배경과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구성원이 평생교육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다문화 시민 2세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논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문화배경 청년의 학습권보장과 역량개발 지원 방안을 본격적인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다문화청년(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은 국내출생자와 중도입국자로 나눌 수 있다. 2020년 기준 다문화 출생아 수는 1.64만 명으로 전체 출생아 100명 가운데 6명을 차지하였다. 5년 전인 2015년(4.5%)에 비해 1.5%p 늘었다. 여기에 중도입국자를 추가하면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은 다문화청년이다. 중도입국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아예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다.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저임금 단순 노동에 종사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제도권 교육을 온전히 이수한 국내출생자들 조차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화로 인해 인력 수요가 줄었고, 가급적 직접 소통하지 않으면서 간섭받지 않으려는 직장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직과 퇴사도 잦아졌다. 삶의 여유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세대의 직업관과 급격히 달라진 직장 문화는 다문화청년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나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하는 직무 역량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 공교육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실무에 바로 투입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직무 분야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일정 기간 실무를 통해 배우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직업인은 실무 역량 그 자체보다 학습 능력이 더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장인은 단편적인 기술이나 지식보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구성원과의 관계형성으로 조직 적응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기본법에서는 누구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생토록 배울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전문적 교육 관료조직을 만들어 교육을 제공했고, 교육을 생존 필수 수단으로 여겼던 대다수 국민은 자연스럽게 계도(啓導) 대상이었다. 이른바 국가교육권론(교육 내용 결정권은 국가에게 있다는 주장)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배적인 공교육 철학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이 기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시간이 지나 지금은 더 이상 국민 계도가 아닌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학습권에 주목하기에 이르렀다. 학습 수요는 크고 다양해졌지만, 제도권 교육은 여전히 국가가 판단하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교육 내용을 결정한다. 제도권 교육이 다양한 학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평생학습은 실무와 사회적 기능을 함께 개선하는 수단이다.

우리 정부는 2021년 6월 평생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도록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바우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를 명문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여력을 고려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계획은 생애주기별 대상 가운데 노동시장 진입기에 있는 청년을 따로 분류하고, 직무 중심 훈련에서 벗어나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발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4개 분석 틀(정체성과 삶의 질, 학습 실태와 교육적 요구, 일과 직업 및 진로,

사회적 관계와 시민 참여)을 중심으로 이번 정부 개정 방향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 및 배제될 수 있는 계층의 외연을 폭넓게 고려한다. 둘째, 학습자가 지역단위로 학습권을 행사하기 쉬워졌다. 셋째, 단편적인 기능 습득보다 포괄적인 직업능력과 사회적 관계를 갖추는 여건을 마련한다.

교육 분야 바우처는 다문화청년·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욕구와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직접 선택하여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발표문의 정책 제언에 추가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결된 학습기회를 지역 공동체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학습권을 행사하도록 선택지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존 평생학습 콘텐츠를 더 다양하게 갖춰야 하지만, 당장은 이미 활성화한 민간 플랫폼에서 바우처를 활용하도록 연계해야 한다. 한편, 청년·청소년이 교류하는 구심점은 지난 4~5년에 걸쳐 각 지역에서 앞 다퉈 설립한 청년 및 청소년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전후로 다양한 연령대별 공간을 지자체별로 마련했지만, 세대를 엄격하게 구분할수록 역설적으로 교감을 둔화시키기도 한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은 크고 작은 불편이 따르더라도 가급적 서로 만나 활발하게 교류함으로써 포괄적 역량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특정 계층의 별도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오직 학습 과정을 계기로 세대와 문화를 넘나드는 자생적 학습 공동체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연령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 커뮤니티와 각종 공간은 애초 기획 방향과 목표를 세대와 계층 통합화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청년·청소년 교육은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70년 가까이 학습자의 권리보다 교육의 의무를, 지역의 교육 자주성보다 국가 교육 통일성을 앞세웠다. 또한 30년 가까이 다문화교육 정책은 언어를 습득해 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금은 지식과 정보의 내용 주기가 매우 짧아졌고,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형식을 아예 갖추지 않은 다양한 학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 과정을 설계하기보다 비형식·무형식 학습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전환함으로써 학습권을 효율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다문화청소년 교육의 방향과 과제: 평생교육 관점의 정책 접근』 토론문

(**이로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다문화청소년 교육의 방향과 과제: 평생교육 관점의 정책 접근』 토론문

이로미(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주와 교육의 문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로서 본 토론자는 오늘 발표의 근간을 형성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에 대해 우리 사회의 다문화청소년 및 청년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연구로 생각해 왔다. 제안된 정책 중 일부라도 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의 사회통합’ 및 세부 목표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발표자가 제시한 바대로 “이질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 혹은 사회구성원을 우리사회의 중요한 ‘시민’으로 상정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학습을 제공” 하려면 정책의 대상을 ‘학령기’ 아동으로 정책 대상을 제한하기 보다는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34세까지로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에서도 이주배경 청년의 존재가 보다 설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가 앞으로도 청년정책 입안자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연구자에 의해 제안된 정책이 구체화를 띠는 과정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사람들’이다. 이에 정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교육과 학습에의 지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다. 당사자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겐 쉽게 지나치게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여기에 주목하게 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생각과 함께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며 이를 기반으로 그를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해 낼 수 있게 된다.

‘이주와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이지만 토론자 본인에게도 그런 기회는 쉽사리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PLURAL+ 2020 상영회 ‘이주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보다’에 참여한 경험은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다. PLURAL+ 는 청소년들이 이민, 다양성, 사회적 포용 등의 이슈에 대해 창의적 시각을 제시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단편영상 페스티벌이다. 2020년에는 이민정책연구원과 IOM 한국대표부가 역대 PLURAL+ 수상작 중 일부를 상영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의 경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사실 이주 관련 연구를 하면서도 이주와 양육에 대한 사적 경험을,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공유한 경험은 처음이었다. 이 자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이야기는 ‘(이주배경에 처한) 아이의 싸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두 나라에 걸쳐 아이를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길게 이야기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비로소 ‘내 아이의 싸움’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뒤돌아보게 되었다.

오늘 발표자의 연구에서도 ‘아이의 싸움’은 뚜렷한 목소리로 실체를 가지며 여러 번 등장한다. 심리학은 잘 모르지만 어느 신문기사에서 본 연구결과가 생각난다. 청소년기에는 뇌와 신체가 민감하

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겪은 인종차별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언어와 문화에 있어 여느 ‘한국 아이’ 들과 다를 것이 없는데 ‘단지 다르게 생긴 외모 등으로 차별받게 되는 게 문제’”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한국 출생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삶의 궤적 속 생기는 초국가적 경험(transnational experiences)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은 성인이 되기 전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 두 나라/언어/인종/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타인에게 차별받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남들은 물론 부모도 잘 몰라주는 정체성 싸움을 한다.

중도입국 청년들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기에 입국하여 외국인인 부모보다 빨리 한국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어른들의 통역이나 다른 형제의 돌봄 등, 성인인 부모의 일과 어려움을 나눠 갖는 경우가 많고 정작 자신의 어려움을 돌볼 새가 없는 청년들이 상당하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성인으로서 쭈욱, 잘 살아갈 자신을 상상하는 게 어렵다. 엄마와 함께 택시를 타는 일상의 일도 차별의 경험을 선사하므로 엄마는 대개 입을 다물고 본인이 홀로 감당하거나 출입국사무소 사무관들의 위압적인 태도 속 초조한 기다림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또래와는 다른 싸움을 한다.

정리하면, 이주배경청소년에게는 이주로 인해 생기는 경계(borders)에 대한 사유의 기회가 존재한다. ‘좋지 않은’ 사회에서는 ‘경계’가 이들을 권리들로부터의 배제를 사유하는 맥락에 위치시킨다. 그러나 ‘좋은’ 사회에서 이주배경청소년 본인은 ‘경계’에의 조우(encounter)를 통해 성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는 학습에 함께 참여한다. 오늘 발표자가 제안한 ‘평생교육 관점의 정책 접근’ 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해석해 보았다.

끝으로, 좋은 연구이지만 자칫 이런 정책들이 위에서 아래로 (top-down) 내려가는 방식의 정책 실천이 될 경우 자칫 ‘성과’와 ‘지표’만 주목받고 실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교육과 학습에 미미한 결과만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현재 안산시와 구로구 등, 이주민과 정주민의 상호이해를 평생학습 접근으로 고민하고 있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외국 속담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재는 지역사회의 많은 이들이 모여 미래세대를 양육하는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이미 떠나온 과거, 서로서로를 향한 도움이 자연스러웠던 ‘공동체의 복원’일 수도 있다(정민승, 2021)[10]. 그러나 ‘이주’ 가 일상이 된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는 옛날 그대로의 공동체이기 보다는 ‘가벼운 공동체’ 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공석기, 임현진, 2020)[11]. ‘가벼운 공동체’란 누구나 쉽게 들어오고, 쉽게 적응하고, 또 쉽게 옮겨갈 수도 있는 공동체이고 이 공간의 새로운 동력은 누가 뭐래도 막 성인이 된 청년이다. 이주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마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으로 성장하는 경험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마을이 생겨나고 있음을 목도하지만 이런 마을이 이주민이 많은 곳에서만 가능하다면 이들은 삶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곳저곳으로 옮겨가기란 여간해서는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한국사회를 자신이 시민으로 살아갈 곳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10) 정민승(2021). 평생학습,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 에피스테메.
11) 공석기, 임현진(2020). 마을에 해답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역 되찾기. 진인진.

현 정부의 국정 목표 중 ‘지방시대’가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라는 이 정책과제의 수혜자가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최근 국익에 도움이 될 외국인을 유치할 것이며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민청 설치’가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구소멸시대’의 위기를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게 맞고 있는 우리 사회에 우수한 외국인을 유입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발상인데 ‘이미’ 세계 곳곳과 연결되어 있고 ‘이미’ 여기에서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는 존재인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이민청 추진과 별개로 인식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 청소년 정책 수립 현황은?

(**허승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부센터장)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 청소년 정책 수립 현황은?

허승연(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부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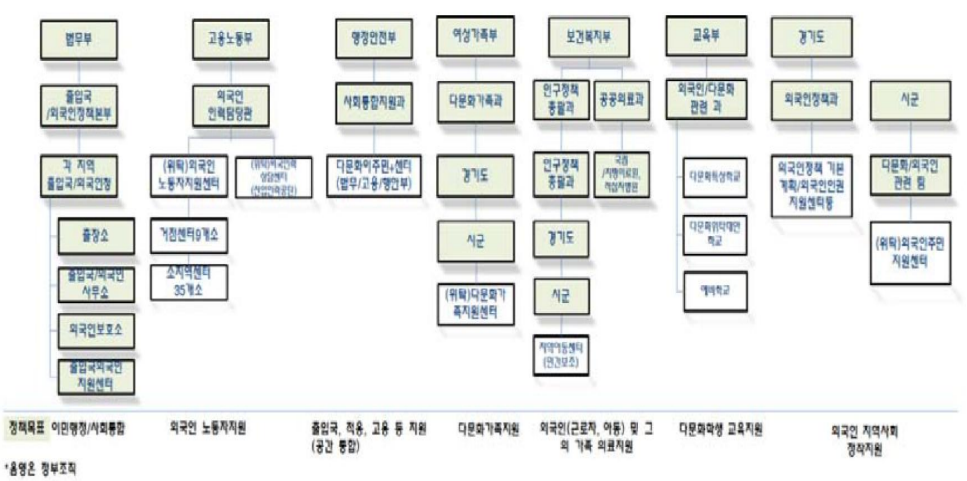
다문화 가족을 만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는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이제 후기 청소년기가 되어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토론에 나섰습니다.

안산시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내용을 발제해 주신 이혜숙 과장님의 발제문을 보며 '상호문화도시', '다문화 포용도시'에 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지만 후기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한 자체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을 반성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신 것을 보며 안산시가 이럴진대 우리 한국 사회가 토종?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얼마나 포용하고 수용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10여 년간 지역의 다문화 복지 실천 현장에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과 또 다르게 사업을 실행하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 전체 외국인 주민[12] 정책 실행 현황

- 외국인 정책은 "중앙정부-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로 **연결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중앙정부-소속행정청-사업수행기관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전달 구조를 갖고 있음.



※ 출처 :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보고, 오민수, 경기도외국인주민을위한사회서비스연계활성화방안연구, 2020-21

- 중앙정부의 이주 외국인들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방향이 설정되어있지 않고, 그로 인해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조가 없으며 전문적인 서비스 실행이 되지 않고 있음.

12) 법적 용어는 아니며, 국내에 거소를 둔 외국인과 그 자녀를 지칭하며 국적취득자와 미취득자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

▪ 전담 부처의 부재와 사업 시행 주체들 간의 연계·협력 부족

- 중앙정부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기능별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전담 부처를 지정하여 Control Tower 역할을 하도록 해야함.
-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서로 다른 중앙부처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지역 기관들이 있으나 이들이 타 기관과 업무를 연계·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이 주어진 업무만을 시행하고 있음.

▪ 정책 사각지대 발생

- 각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중복지원 혹은 사각지대 발생.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의 정책대상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귀화자와 그 자녀,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유학생, 보건복지부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자녀들만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 밖에 있는 이주민들은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음.

▪ 중앙정부 중심의 외국인 주민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시행하는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차별성 부족

- 지자체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구성과 체류 목적은 각 지역별 산업구조 등의 차이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정책 및 행정비용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이민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수준에 한정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 정책은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 지원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점차 다양해지는 정책대상 -노동자, 중도입국 청소년, 여성, 동포 등 -의 잠재적· 신규 외국인에 대한 욕구에 대응한 정책 부족

□ 다문화 청소년 관련 정책 실행 현황은?

▪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복지서비스 종류

구 분	수행기관	사업내용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 다가감, 다배움 사업 등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학습지원 등
	드림스타트센터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교육부	각급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습, 문화체험, 심리상담, 각종 복지-치과·안과 치료, 학습준비물지원, 가정방문 등-서비스)
지자체	가족센터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련 시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고국방문 지원사업, 자녀방문학습지 교육지원, 발달검사 및 치료비 지원,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정착장려금, 다문화가족자녀학습비 지원, 가족 캠프, 나들이,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 등등

- 국내출생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에 따른 후기 다문화 청소년지원 정책의 필요성은?
- 다문화가족에 대한 낙인과 편견 등 취약계층으로 범주화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할까?

▪ 해외출생·성장 후기 청소년기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지원 정책 현황은?

구 분	수행기관	사 업 내 용[13]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 교육지원 : 레인보우스쿨(한국어교육), 교육컨텐츠 개발,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기관 지도관리 • 심리정서지원 : 상담 및 사례관리, 상담통역지원, 심리사회적응검사 보급 • 인식개선 프로그램 : 다문화감수성증진 PG(다가감) • 연수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인력 양성 • 연구개발 :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조사연구 등
지자체 자체 운영	서울온드림 교육센터	•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 •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 • 특화서비스 : 귀화, 취업지도, 검정고시,대입준비반 등 • 문화체험
	수원시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	• 정착기반사업 : 초기상담을 통한 욕구사정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체류 및 종합정보제공 상담 등 • 맞춤형교육사업 : 수준별한국어 교육(훈련정음), 경기도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예비학교운영, 1:1 멘토링 교육사업 • 심리안정화사업 : 심리전문상담, 통합동아리활동, 문화예술단 운영, 문화여가활동 체험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 자립역량강화사업 : 검정고시반, TOPIK반, 자격증취득지원, 진로지도 및 체험, 진로 및 직업 전문상담 등 •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사업 : 유관기관 MOU, 지역조직화, 홍보 등
	안산시글로벌 청소년센터	• 교육문화지원 :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 및 예비학교, 개별학습 멘토링 등 • 심리정서지원 : 집단심리정서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지원 프로그램 • 사회통합지원 : 난민아동지원, 부모교육, 통합사례관리 등 • 진로재능지원 : 꿈다리학교, 비전지원 꿈꾸는 아이들, 이주배경청소년 자치공동체, 진로상담 등 •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 심리정서지원, 진로 인턴십 등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중도입국 청소년 규모는 약 30만 명.[14] 이들은 고 연령대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
- 생애주기 중 교육 및 진로 등 발달과업 수행의 중요한 시기이나 외국인 신분으로 타국에서 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1차적 지지집단의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조차 서비스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연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전국 각 지역별 외국인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 및 종합정보 제공에는 매우 취약한 상황.

13) 각 사업내용은 복지로와 센터 홈페이지 게재 내용 활용
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 연구(’20. 1.)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 청소년 정책 추진 개선 방안 제안

▪ 다문화 청소년에 맞는 특성화된 전담부서 및 인력배치 필요

- 결혼이민자를 주 대상으로 사업실행을 위해 조직된 기존의 「가족센터」를 자녀를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장하기 위한 시설환경 조성, 인력 편성 등 전면적 조직 개편 시도 절실 → 단순히 사업비와 부분 인력만 추가하는 것으로는 부족
- 국내 출생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약 계층에 한해 지원해야 할 사회보장 범위 선정 및 지원체계 명확화, 서비스 이력 관리(사례관리를 통한 전산시스템 입력 등)를 통한 맞춤형 One stop 서비스 지원
- 다문화 청소년 중 한국에 장기 거주하며 성장할 외국인 신분의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지원 기준 및 원칙 마련
  : 체류자격 범위를 초과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현재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다문화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구축

- 중앙부처는 방향이나 비전을 설정하고 다양한 부처 간 정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 및 건의를 통해 정책 실행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다문화 청소년 유형 및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자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문제점은 중앙부처에 건의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외국인 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

- 전국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인 주민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도가 거의 없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의 환경과 특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

【참고문헌】

· 경기연구원, 이현우 책임연구원(2020-68), 경기도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
· 이민정책연구원, 유민이/이혜경(2019-11), 분권의 사각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현황
· 경기복지재단, 오민수 연구책임(2020-21), 경기도 외국인 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해육·윤영근(2016),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통합정책 연구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근본적 정책개선이 우선이다.

(**김수영**, 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 대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근본적 정책개선이 우선이다.

김수영(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 대표)

이주를 경험한 이들이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그 수가 약간 주춤하긴 하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 한국 사회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6만명(2022.06 기준)[15]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의 수치로 다시 소폭 증가하고 있다. 잠시 주춤했던 국가 간의 이주는 코로나를 극복 혹은 회복이라는 전환을 통해 다시 증가할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이 그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처럼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들을 위한 정책들이 먼저 고민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책포럼은 아주 시의 적절하게 진행된다 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사회에 정착한 이주배경청소년과 향후 한국사회에 발 딛게 될 많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 토론자는 안산시 청년정책과 이혜숙과장님의 '지방자치단체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사례와 함의-안산시 청년정책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토론에 앞서 안산시는 이전부터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그 여느 지자체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이주배경청소년 현장 활동가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번 자리를 통해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정책을 펼쳐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주배경청소년 및 청년의 정책에 대한 발표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 질문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성장환경 개선이 우선이다.

발표자는 이주배경 후기청소년과 청년사업이 미흡한 이유로 '한국 사회가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근거를 들며, '「청소년기본법」이 2020년 제정되면서(지자체에서는 2015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 이 법에서 정한 만 19세~34세의 청년을 중심으로 정부 및 관계부처에서 청년정책의 계획의 세우기 시작'고 주장한다. 토론자는 위 주장에 대해 정책의 대상자는 한국 정부의 법이나 지자체의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토론자는 '사회 서비스(복지 서비스) 대상자 혹은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대상자는 욕구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자'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에 이주자들이 오면서부터 다양한 가족 구성 및 그들의 자녀 문제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지자체의 노력(?)들은 수동적이거나 최소한의 수준으로만을 지원하거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쳤다. 지자체나 정부의 그간의 경향으로 살펴보자면, 청년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기에 이주배경청년들의 문제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과 성장환경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주인으로서 주요한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하고 바라보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내용 들은 그간의

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2년 6월호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충분하니 이제 이주배경청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자가 아닌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환경과 이들을 한국사회의 주요한 주역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정부 모두 이주배경청소년이든 이주배경청년이든 정책의 대상자들을 어떻게 정의하던 간에 이들이 왜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근본적 고민에 대해서는 체류 문제, 성장배경의 문제, 진로·진학의 문제 등 너무나 다뤄야 할 것이 많기에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에 대한 원론적 고민과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이주배경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다르지 않다.

2022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한국 거주 체류 외국인[16] 중 19세 이하는 148,927명(7.2%), 20~29세는 429,093명(20.9%)으로 청년의 인구가 아동·청소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표〉는 한국에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 중 5년 전, 10년 전 19세 이하 청소년과 20~29세 청년들의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수가 청년의 수치보다 갈수록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는 청년인구가 더 많다.

〈표〉 한국거주 체류외국인 중 아동·청소년과 청년의 수치 비교

년도	19세 이하	20~29세
2022년 6월	148,927명(7.2%)	429,093명(20.9%)
2017년 6월	139,302명(7%)	510,140명(25%)
2012년 6월	78,322명(5%)	414,736명(2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재정리」

발표자는 '그간 다문화정책들은 주 대상을 아동청소년이나 결혼이주민으로 설정하여 다문화 및 이주배경청소년은 고려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해 토론자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은 제대로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특정 시·도(안산, 수원, 서울, 김포, 부산, 김해 등)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위한 지원기관이나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토론자는 이주를 한 아동·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성장주기에 맞는 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주배경청년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서비스체계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좀 더 극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서비스 전달체계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지원 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앞서 말했듯 안산시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에서도 매우 선도적이며 모범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다른 지자체에도 관련 사업과 센터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길 바라며, 이주배경청소년을 넘어 이주배경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지금처럼 모범적으로 잘 확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16) 이주배경청소년 혹은 이주배경청년들 중에는 대다수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체류 외국인 수치로 살펴보았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인 쇄 2022년 8월 11일
발 행 2022년 8월 1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인쇄처 (주)삼일기획 전화 044)866-3011